

# 전주시,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높인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각 분기별로 전주시내버스 회사 및 노조에서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및 불친절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총 900여명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을 유형별 민원사례를 근거로 매년 불편사례집을 제작, 운수종사자의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 교육책자에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대표적인 민원접수 사례 76건이 수록됐다. 유형별로는 결행, 무정차, 승·하차거부, 지연발, 폭언·난폭운전, 기타 등 신고유형별 민원사례 6개 분야 50건과 모욕적인 폭

## 유형별 시민불편 사례집 제작 운수종사자 교육자료료 활용

언, 조마조마한 난폭운전, 기타유형 등 불친절유형별 사례 3개 분야 26건이다.

교육책자에는 운수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과 운수종사자준수사항, 시내버스 요금 및 교통카드 이용안내 등 '안전운행'에 대한 기본교육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전주시 시내버스 운수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도 지난달 18일 전주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다.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전주시 시내버스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상에 명시된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해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재정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주시 시내버스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전주시 시내버스 운수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시내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로 변경,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촉진에 관

한 사항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토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시민의 버스위원회의 중점추진 사업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일 2교대 도입 △전주?원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시내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들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버스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병업 전주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및 복지 환경 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렌터카업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위반 적발시 행정처분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렌트카(대여자동차) 업체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기로 했다. 전주시는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3주간 렌트카업체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지도점검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에 등록된 렌터카업체의 주사무소 12개소와 타지역 영업소 3개소 등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사무소·영업소 차고지 확보 및 관리실태, 법정 등록기준 이상유무, 계약서 작성 민원발생 이기사항, 대여약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최근 한옥마을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으로 수천만원의 부당편익을 취한 렌트카 업체가 최근 경찰에 구속되는 등 렌트카 피해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흡집 보상·차차 사고처리비용 등 주요 민원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차량 인도 전 점검표 작성여부, 자차보험과 관련한 약관 세부내역 공지, 사고 시 휴차손해부담·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한 안내 내용의 계약서 명시 등 현장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등 렌트카 업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주시 이미지를 실추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총파업을 선포한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술 취해 고속도로 역주행

### 30대 여성 운전자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대장 윤택기)는 23일 술에 취해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혐의(난폭운전)로 A(33·여)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48분께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6km 지점에서 만취해 역주행 한 혐의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결과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이씨는 이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고창까지 달리다가 고창톨게이트를 통해 빠져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로 다시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해 영광IC까지 15km를 역주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운전자들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안진수 기자

## 무속인 집만 턴 30대 女 덜미

익산경찰서는 23일 익산지역 무속인의 집만 돌려주고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8·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20분께 익산시 평화동의 무속인 A(50·여)씨의 집에 침입해 법당 밑에 보관 중인 현금 300만원과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 출석부 조작 국고보조 훈련비 챙긴 학원장 징유

훈련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훈련비를 받아 챙긴 사설교육학원 원장과 훈련강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정운현 판사)는 허위로 기재한 출석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설교육

학원 원장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훈련강사 박모(37·여)씨 등 4명에 대해선 각 징역 4월~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용주 기자

# “전주항공대대 공사중단을”

## 전북시민단체, 전북도 해결 노력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사업 공사 중단과 전북도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민회와 전북녹색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항공대대 이전사업 공사를 강행,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전북도의 중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다들마당과 시민원탁회의 등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김승수 시장이 항공대대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북도 차원에

서 대안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며 "항공대대 이전사업 부지 도도동 인근 김제시와 익산시 등 인근 지자체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일방적 결정에 맡길 게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된 갈등과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주시에 있다"며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무리하게 공사 착공을 강행해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은 김승수 시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에도 전주시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다면 주민들과 힘을 합쳐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을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 뺑소니 사망사고 16년간 해외도피 50대 징역형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50대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16년간 해외로 도주한 혐의(특기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1999년 11월 29일 오후 6시25분께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시속 7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A(당시 13)양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양은 큰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숨졌다.

손씨는 사고 직후 사고 차량을 처분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아는 제보자의 신고로

수사당국이 손씨를 지명수배했고, 손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다 미국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로 인도,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뺑소니 후회를 하며 약 16년 전에 발생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보훈금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유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용서받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